

이 자료는 2009년 12월 10일(목)
16: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 -

2009. 12. 10

관계부처 합동

I. 우리 경제의 현 좌표 점검	1
1. 그간의 경제적 성과	
2. 정책대응 및 평가	
3. 우리 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도전과제	
II. 2010년 경제여건 및 전망	8
1. 대내외 경제여건	
2. 2010년 경제 전망	
III. 201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13
IV. 2010년 중점 추진과제	15
1. 경기회복 공고화	
2. 일자리 창출	
3. 서민생활 안정	
4.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5.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6. 미래과제 준비	

[맺음말]

< 별첨 1 > 2010년 경제정책과제 세부내용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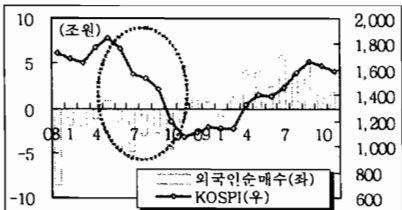
I. 우리 경제의 현 좌표 점검

1. 그간의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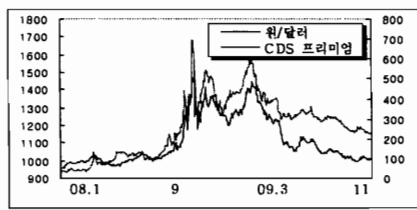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작년 4/4분기 이후 큰 폭의 경기위축을 겪었으나, 금년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 ① (위기이전 경제상황) 유가급등, 가계·중소기업 부채 증가, 단기 외채 급증, 경상수지 흑자감소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
- ② (경제위기의 전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자금유출, 외화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

주가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



원/달러 환율 및 CDS 프리미엄



○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내수도 동반 위축되면서 08.4/4분기중 큰 폭의 경기위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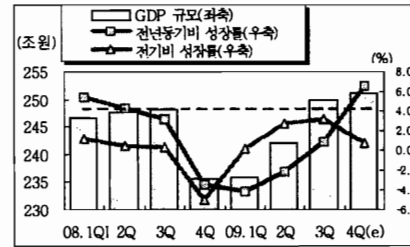
* 08.4/4분기 성장률(전기비, %) : (한국)△5.1 [(외환위기시(98.1/4)△7.8] (미국)△1.4 (유로)△1.8 (일본)△3.4 (영국)△1.8 (싱가폴)△4.4

③ (최근 경제동향)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체질과 정부대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금융시장과 대외부문도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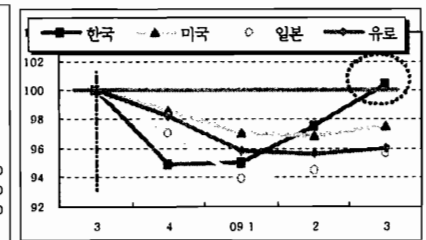
○ (경기 회복)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시장안정 조치 등에 힘입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 전기비 성장률이 1/4분기중 (+)로 전환되고, 2/4분기에 2.6%, 3/4분기에는 3.2% 성장하여,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
- 아직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

분기별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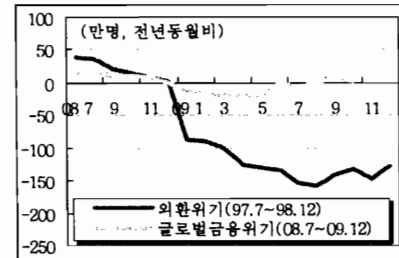
주요국 GDP 수준(08.3/4분기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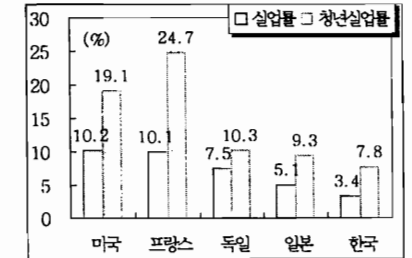
○ (완만한 고용둔화) 경제위기로 고용사정은 악화되었으나, 과거 외환위기시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

- 일자리 나누기, 단기일자리 등 정부대책과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이 급격한 고용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시와 취업자 증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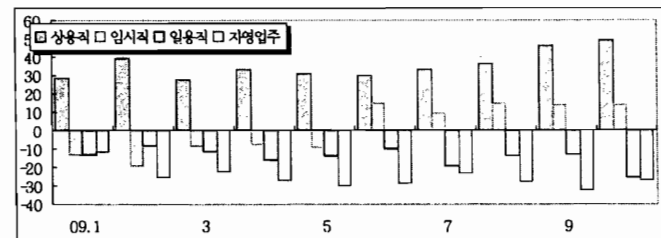


주요국 실업률·청년실업률 비교('09.10월)



- 다만, 상용직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일용직·자영업주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금융시장 안정)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은 09.2/4분기 이후 안정세 회복

- 주가·환율이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시장금리는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등락

주가·환율·금리 추이

	08.9	12	09.3	6	9	10	12.7
KOSPI(기간중 평균, p)	1,447	1,115	1,140	1,395	1,659	1,631	1,633
원/달러 환율(기간중)	1,137	1,369	1,453	1,262	1,215	1,175	1,153
회사채 3년물(기간중, %)	7.46	8.35	6.14	5.21	5.58	5.60	5.35

○ (대외부문 안정) 금년중 △20%대의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은 9월이후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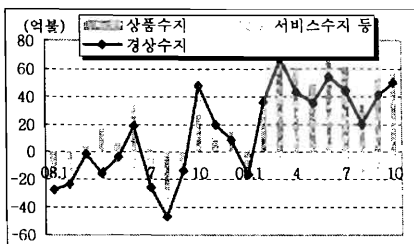
- 유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 하면서 수출입차 흑자가 지속

-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 및 상품수지 흑자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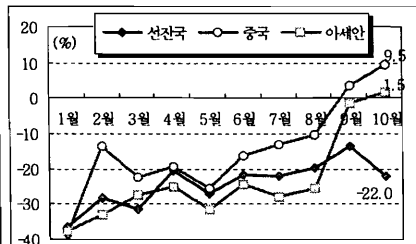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추이(% , 억불)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수출	13.6	17.4	23.1	27.0	△9.9	△25.1	△20.7	△17.4	△9.0	△8.5	18.8
수입	22.0	28.9	30.5	42.8	△9.0	△32.7	△35.8	△31.0	△24.7	△16.0	4.7
수출입차	△133	△66	△3	△79	15	30	171	106	43	36	41

경상수지 추이



지역별 수출증가율(09년)



2. 정책대응 및 평가

① (정책대응) 정부 출범시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제시

○ 선진화 원년 선포(08.2.25, 취임사), 녹색성장(08.8.15 경축사) 등을 통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민역량 결집을 유도

○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비상경제정부'(09.1월)를 구성하고,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

- '중도실용 민생정부'(09.8.15 경축사) 구현을 목표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② (평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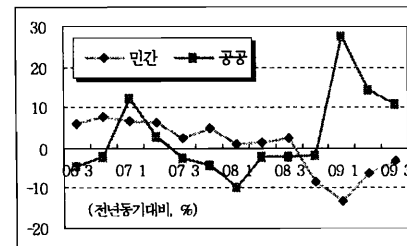
○ IMF 등 국제기구와 주요 외신들도 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과 경제성적을 높게 평가

* IMF(09.12월, 연례협의) : 종합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
 * Fitch社(09.9월, 신용등급평가)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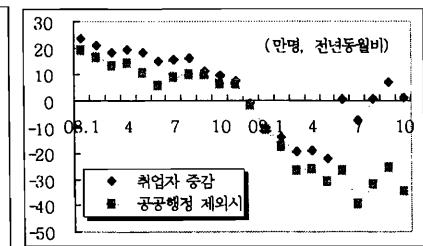
○ 그러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여건의 개선도 미흡

-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유가상승세, 신종플루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 추이



취업자 증감 추이



○ 위기대응에 중점을 둔 결과, 위기극복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

< 참고 1 > 지난 2년간의 주요정책 추진실적

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위축을 보완

- 수정예산·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위축을 완화
-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를 통해 기업·가계의 부담을 경감

②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시스템 불안요인의 확산을 차단

- 기준금리 인하(5.25%→2.0%),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
-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 미·일·중과의 통화스왑, G-20정상회의 등 국제공조 강화

③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

-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도모
- 생계구호,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미소(美少)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정책 강화

④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대비 노력도 병행 추진

-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공·노동부문의 개혁 지속
- 9개 유망 부문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9.5월)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R&D투자 확대 등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추진

3. 우리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도전과제

◇ 그간의 성장전략을 재검토·보완하고,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도전과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점

- ①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나타날 전망
- 세계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경제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전망
 -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간 이견 표출 및 新보호무역주의 발호 가능성
 -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다극체제로 전환
 -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적응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존립을 판가름

② (우리경제의 현좌표)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 → 생산성과 내수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 전환 불가피

- 그동안 우리경제는 ①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②대량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발전
 -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확대와 추종전략(catch-up)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
- 그러나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노출
 - 서비스산업의 발전 미흡으로 내수 및 고용창출기반이 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
 -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규제개혁성과 만족도(09.3월, 전경련, 전년동월비, %) : (만족) 8.9→27.1 (보통) 43.8→61.1 (불만족) 47.3→9.0

③ 향후 도전과제

① 경제의 역동성 저하 및 고용창출기반 약화

- 투자성향 보수화, 노동공급 둔화, 총요소생산성 정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 등이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 저해
- 기업·산업의 인력수요와 인력양성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법제 선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추진 필요

② 높은 대외의존도와 경제 취약요인 상존

-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민감 → 내수기반 확충 필요
- 위기시 자본회수 등에 대비 외환부문 리스크의 상시 관리 필요
- 가계·기업 부채 증가로 인한 부실위험 완화 필요

③ 경제·사회 시스템의 이중구조

- 소득 능력의 차이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적 이동성이 제약되고 사회통합 저해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완화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④ 후진적 의식·관행 및 잠재적 미래위험요인

- 법질서 및 공권력 경시, 제도·관행의 투명성 미흡, 후진적 노사문화 등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저해
- 그간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참여와 리더십이 제한적 →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품격 제고 노력 시급
- 기후변화·고유가에 대응하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 요인에 체계적 대응 필요

II. 2010년 경제여건 및 전망

1. 대내외 여건

-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소지 등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
- ◇ 국내경제는 내년중 잠재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유가 등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대외 여건)

- ① (세계 경제) 금융시장 안정, 세계교역량 회복 등으로 2010년 (+) 성장이 예상되나, 성장속도는 위기이전에 비해 완만할 전망이다
-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재정여력 약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 기후변화 및 환경과 관련한 정책들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 무역 조치로 작용하여 교역량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단위 : %)	실적			전 망			
	09.1/4	2/4	3/4	09년 연간		10년 연간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1.1	△1.7	3.1	3.4
미 국(전기비연율)	△6.4	△0.7	2.8	△2.7	△2.5	1.5	2.5
유 로(전기비)	△2.5	△0.2	0.4	△4.2	△4.0	0.3	0.9
일 본(전기비)	△3.3	0.7	0.3	△5.4	△5.3	1.7	1.8
중 국(전년동기비)	6.1	7.9	8.9	8.5	8.3	9.0	10.2

註: 1)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세계 성장률은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09.10), OECD Economic Outlook(09.11)

② (국제 유가) 금년 하반기(09.7~11월 평균 70.8\$)보다 소폭 높은 연평균 80\$(Dubai油 기준) 내외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석유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높은 재고수준, 투기거래 제한 움직임 등이 상승폭을 제한

* 세계석유재고(연평균, 백만배럴)
: (04)6,155 (05)6,414 (06)6,550 (07)6,561 (08)6719 (09.1~10)6,933

유가전망 (\$/b, 기간평균)	유종	09년	10년				
			1/4	2/4	3/4	4/4	연간
예경연(09.11)	Dubai	61.2	72.9	73.6	73.9	77.1	74.4
EIA(09.11)	WTI	62.0	76.5	77.0	78.7	80.3	78.1
PIRA(09.11)	WTI	61.8	80.5	82.7	84.2	87.9	83.8

*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③ (국제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정흐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美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실은행이 늘어나는 등 추가적인 금융부실이 발생할 우려

* 미국 상업용부동산 연체율(%) : (08.9)4.72 (12)5.44 (09.3)6.46 (6)7.91
* 문제은행수(개) (08.6)117 (9)171 (12)252 (09.3)305 (6)416

○ 서유럽 고부채 국가의 신인도 하락, 동유럽 대출의 부실 확대 등으로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신흥국에 대한 자본이동의 급변동으로 인해 금융불안이 야기될 소지

[대내 여건]

① (경기 여건)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가계·기업과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는 데에는 한계

② (민생 여건)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③ (정치·사회 여건) 지방선거('10.6월), 노동분야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소지

2. 2010년 경제 전망

① (성 장) 세계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전기비 1%내외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 예상

○ 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소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 증가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기업심리 개선, 환율안정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11% 수준 증가

○ 건설투자는 SOC 투자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회복되면서 3% 수준 증가

②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금년보다 흑자폭이 줄어들면서 연간 150억불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

○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으로 연간 13% 수준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 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연간 21% 수준 증가 예상

③ (고 용)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는 연간 20만명 내외 증가 예상

④ (물 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 및 디플레이 갭(잠재 GDP > 실제 GDP) 지속의 영향으로 3% 내외에서 안정 예상

2009년 및 2010년 전망

	2009년	2010년
· 경제 성장률	0% 수준	5% 내외
· 취업자 증감	△7만명	20만명
· 경상수지	420억불	150억불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	3% 내외

< 참고 2 > 2010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1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25명,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및 일반국민(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11.12일~24일)

① 현 경제상황 진단 : 일반국민은 「계속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

	계속 어려운 국면	회복 국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
일반 국민	61.1%	35.3%	2.6%
경제전문가	34.2%	64.3%	1.5%

② 2010년 중점 경제정책방향 :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전문가는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응답 (복수 응답)

	경기 활성화 노력 지속	위기 대응 정책 정상화	위기재발 방지노력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등 미래과제 대응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소득분배 개선		산업 등 미래산업 확충
일반 국민	37.9%	8.6%	11.7%	6.7%	72.6%	18.4%	15.7%	25.2%
경제전문가	47.4%	16.3%	13.8%	8.6%	48.3%	8.0%	49.2%	7.1%

③ 출구전략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비상정책들을 당분간 유지해야 함」으로 응답

	비상정책들을 곧 거두어 들여야 함	비상정책들을 당분간 유지해야 함
일반 국민	14.9%	79.4%
경제전문가	25.5%	74.5%

※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시 「고용을 포함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여부」(54.5%)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

④ 서민생활안정 : 일반국민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교육비부담 줄이기」, 전문가는 「고용대책」,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 (복수 응답)

	고용대책	물가·부동산	세금부담	서민금융	교육비 부담	복지지출
		안정	줄이기	확대	줄이기	확대
일반 국민	39.5%	45.6%	39.3%	12.3%	42.5%	18.9%
경제전문가	82.8%	53.8%	9.2%	3.4%	39.7%	7.4%

< 참고 3 > 주요국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

- ① 2010년에 주요 국가들은 ①경기회복추세의 유지 및 출구전략의 시행 준비 ②재정건전성 회복 ③산업 구조조정 ④고용안정 등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
- ② (미국) Christina Romer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합동 경제위원회 보고(10.22)를 통해 출구전략의 적절한 추진, 재정 적자에 대한 대응, 고용대책을 '10년 중 주요 대응과제로 제시
- ③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12.5~7일)를 통해 거시경제 조절 능력 제고, 경제체제 개혁, 국제수지 균형, 민생안정 등 6대 주요 운용 방침을 발표
- ④ (일본)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11.20)
 - 디플레이션 대책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아동수당·출산장려금·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고용과 내수 촉진
- ⑤ (EU) EU 집행위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출구전략 마련 및 시행을 시사
 - 금융부문 지원조치 철회 원칙과 잠정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범유럽 금융감독체계 구축 추진
- ⑥ (영국)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
 - 친환경 산업 육성, 실업자 해소 정책,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 유지
- ⑦ (프랑스) '10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시사
 - 폐차보조금 정책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기업세를 폐지
- ⑧ (독일)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제거, 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Ⅲ. 201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① 2010년에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

-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투자 및 고용증가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
- 이와 함께, 정책의 중심을 점차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등 중장기 지속발전 과제로 이동하여 '선진일류국가'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

② 이를 위해 6개 분야에 걸친 주요과제들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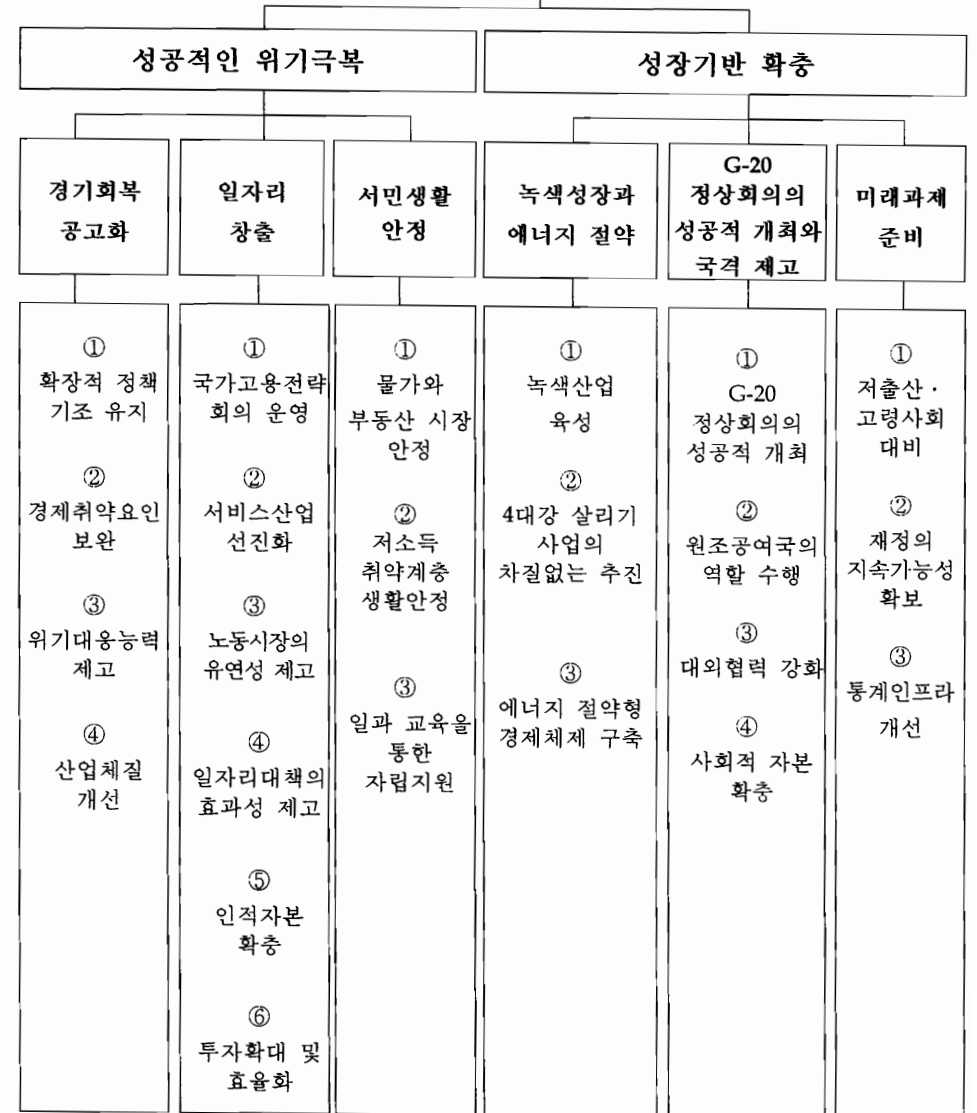
- (경기회복 공고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일자리 창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
- (민생안정)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일과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돕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제고 노력 강화
-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미래과제 준비) 저출산·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

◇ 내년은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과단성 있는 실천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위기발생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실행해 옮길 시점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



IV. 2010년 중점 추진과제

1. 경기회복 공고화

- ◇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
- ◇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
- ◇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

1.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① (거시정책)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 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 2013~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 관리대상수지/GDP(%) : (09)△5.0 → (10)△2.9

<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

(예산대비 비율, 괄호는 실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분기	26.9(26.9)	29.7(28.3)	26.8(25.6)	27.0(24.4)	24.9(22.7)	29.5(32.5)
2/4분기	28.0(28.1)	29.3(31.1)	25.3(27.4)	28.7(31.6)	27.1(26.9)	31.1(32.2)
상반기	54.8(55.0)	59.0(59.3)	52.0(53.0)	55.7(56.0)	52.0(49.6)	60.6(64.8)

-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대응
- 가계·기업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정책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사전 대비

② (한시대책) 예외적·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 한시적으로 확대한 정부 일자리는 민간부문 고용회복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 * (08) 29만명 → (09) 80만명 → (10 예산) 55만명

○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10년 상반기까지 연장. 다만, 한계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 강화

-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 유도

* (기준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 장기·고액 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10년부터 감축 재개 (09년에 감축조치 일시 중단)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10.6월까지 연장

○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09년 말에 종료

< 한시적 조치에 대한 처리계획 >

비상조치	당초시한	처리계획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09말	단계적으로 정상화
- 보증만기연장		- '10.6월말까지 연장
- 보증비율 상향 조정		- 보증비율 정상화(%) * (09)95→(10.상)90→(10.하)85
- 장기·고액보증 감축 중단		- 가산보증료 부과 등 보증감축 재개
· Fast-Track 프로그램		- '10.6월말까지 연장
·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09말	시한 만료시 종료

2. 경제취약요인 보완

- ① (경제체질)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위주의 경제체질을 개선
 -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확충
 -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Rebalancing)을 위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Framework)」 논의에도 적극 부응
- ② (기업)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체질 개선 도모
 - 진행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용 위험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
 - PEF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
 - * 기업재무안정 PEF 등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중(09.4월 국회상정)
- ③ (가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 완화
 -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지속 적용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 다양화*,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유도
 - * 업계 자율적으로 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 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 ④ (공공기관)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을 제도화하고,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추진
 - 단체협약 즉시 공시 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하고 사내복지 기금 출연을 차등화 등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
- ⑤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10.하반)

3. 위기대응능력 제고

- ① (금융부문) 개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 유지 등 국채시장의 안정 노력과 함께, RP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을 도모
 -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
 -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 안정화
 - * 계량지표 반영에 따른 대출축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건전성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등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제고
 - 국제논의(G-20, FSB 등)를 바탕으로 금융감독규제 개선 검토
 - 감독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정비
 -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유동성 창출 예방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예: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 회사와 연계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하는 등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자산확대경쟁 방지
 -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범(best practice) 마련
 - 위기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확충 유도

② (외환부문) 외화자금흐름, 단기외채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환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

-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 및 외환수급과 괴리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 외화유동성 비율 개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외화자금흐름 등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③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의 취약요인 탐지기능을 제고하고 비계량적 요인, 부문간 연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강화

-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4. 산업체질 개선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개선 등 추진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10년 350개)를 발굴하여 제품화·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 강화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신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10.10월) 등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 중점 추진

* 소기업·수출기업 등 1만개(‘10~‘13년) 기업에 대해 생산성 진단부터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연계 지원

② (벤처)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질 좋은 벤처 육성을 위한 창업·성장 여건 개선

- 기업가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패시 제도전에 대한 지원 강화
- 벤처투자펀드(모태펀드+민간펀드)를 3.5조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 ‘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하여 총 3만개 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10년 : 3천개사, 6만개 일자리) 창출

③ (부품소재산업) 수입대체가 시급하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부품·소재 각 10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집중 지원

-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의 수요기업간, 부품소재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신뢰성 공동연구 지원(‘10년 400억원)

④ (정보통신산업) IT 분야 차세대 기술개발 및 신산업 발굴·육성

-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 차세대 메모리, 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4G 이동통신 핵심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선도
-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RFID/USN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
- ‘10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충하여 R&D 및 IT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집중 지원

⑤ (농어업) 농·수협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 R&D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쌀 수급안정) 풍년에도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량 생산대책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
 - 논에 쌀 이외 콩·밀·黍사료 등을 재배토록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콩·밀 등의 자급률은 높이는 방안 추진
 - 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 상품 거래소 도입, 품목 대표조직 설립 등 검토
 - 국수, 막걸리 등 밀가루 제품을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해 가공용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⑥ (유통산업)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유통시장의 선진화 추진
- 산업발전을 지원할 유통구조 개선의 인프라로서상품거래소 설립 검토·추진
- ⑦ (수출경쟁력 강화) 선진적·체계적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
- (서비스 수출기반 강화) 수출관련 정책지원상 제조업 분야와의 차별을 해소
 - 중국 등 인접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 수출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체계 마련
- (수출금융 지원) 수출중소기업 및 선박·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 수은 수출금융 지원확대 계획 : (09년) 53조원 → (10년) 60조원
- 수출기업의 거래 리스크 완화, 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 지원규모 확대(수보)
 - * 수보 보험 지원확대 계획 : (09년) 170조원 → (10년) 190조원

2. 일자리 창출

-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①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 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
- ②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 그간 추진한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 * (예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 진행
- ② (유망서비스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업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를 선정하여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
-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야의 유통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의 선진화 추진
-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마련
- ③ (지역과 연계 강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④ (공휴일 제도 개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① (노사관계 선진화)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
-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방안 마련
-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 추진
-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 검토

- ② (노동유연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
- (근로기준 선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 추진
- *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特定日/特定週의 근로시간을 탄력조정하는 제도
-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
- (근로형태 다양화)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 지원
-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 운영 추진
- (비정규직 제도개선) 비정규직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확대(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직종 중심)

4.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 ① (국가고용전략 수립)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10년 상반기)
-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
- ②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 보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재정의 일자리 지원 지속
-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
-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 제도를 보완·개편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09년 12.9만명 → 10년 14.0만명) 및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 기존 8개(노인 돌봄 등) → 10개 사업(아이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가)
- **제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

③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산학연계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 실시 등 취업지원 강화**
 - * 청년의 구직정보와 중소기업의 구인정보 DB 대상을 확충
 - * 관계 부처의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 등을 연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구인정보를 포함
-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를 구축하여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무유인 제고**

-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우대 지원**
 - * 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신청시 가점부여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펀드**(12년까지 1조원 조성)를 활용하여 문화복지·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⑤ **(외국인 인력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외국인 인력도입·관리 방안 검토**

⑥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

- **내실 있는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을 창업·취업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창업전담인력을 배치**(10년 : 21억원)

⑦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대폭 확대**

- * 실업자훈련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중 : (09)23% → (10)71%
-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을 범정부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확대**(10.4월)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 제고

5. 인적자본 확충

① **(교육제도 개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
- ② **(대학 선진화) 경쟁·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 대학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방안을 통해 구조조정 유도

-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의 출연을 허용(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학생, 기업 등의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공개**(08.12월 시행) 범위 확대

③ **(실용형 인력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

- **대학 부지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방안 마련 추진**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DB구축)·홍보하고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 **연구개발사업 지원시 연구인력 활용 확대 유도**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 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6.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1 [기업환경 개선]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립
 -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 2 [투자 인센티브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외국인투자중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포함
 -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중심으로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R&D 재정투자: 09년 12.3조원 → 10년 13.6조원)
- 3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국가산업발전 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 녹색기술산업, 기술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중점유치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IR 등 전개
 - 수요자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정책센터를 설치(10년중)
- 4 [R&D 투자]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정부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
 - * (08) 11.1 → (09) 12.3 → (10안) 13.6 → (11계획) 14.9 (12계획) 16.6조원
 -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민관 R&D 파트너십 강화
 - 녹색성장 등 상위정책과의 R&D 연계강화,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평가("Early Kill"),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3. 서민생활 안정

- ◇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
- ◇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1.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 1 [물가]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 심리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 목표달성→매년 점검·설명 방식으로 개편하여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이의 안정을 유도
 - * 10~12년 중기 물가안정목표 : 소비자물가 3.0±1.0%, 연 단위로 점검·설명
 -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라면·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 강구
 - *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유인 도입 등 다양한 대안 검토
 -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담합감시를 강화
 - * 독과점 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등을 대상 (09년 담합조사 분야 : 교복, 음료, LPG, 소주, 온라인 음악서비스 등)
 -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 경쟁여건 조성
 - 원자재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 도입을 통해 원자재 가격 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비
 - * 원자재 비축재고(조달청, 일본) : (09) 49 (10) 53 (11) 55 (12) 60

- ② (부동산)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 적극 대응
 - 보급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사전예약방식)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
* '10년 사업승인 계획 : (당초)전국 14만호 → (확대)전국 18만호
 -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은행 10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10.2월)하고, '10년 중 2조원 규모 토지를 비축
 -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 ① (취약계층 지원) 미혼모·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최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 : 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신규 도입('10.7월 시행)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기초노령연금 : (09) 363만명, 2.5조원 → (10) 375만명, 2.7조
** 노인일자리 : (09) 16만개, 1,166억원 → (10) 17.6만개, 1,286억원
 -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조정('10.1월→'10.3월)

- ② (주거 복지) 수요자 중심의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
* 임대유형별 공급계획물량 (연평균) : (영구임대) 1만호, (국민임대) 4만호,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호, (장기전세) 1만호, (10년·분납임대) 2만호
 - 도심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
 -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신규 추진('10년 415억, 1만가구)하여 주거환경 개선
- ③ (농어민 복지) 주거·교육 등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시행('10.1/4분기)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④ (문화 복지) 문화서비스가 촘촘히 보급될 수 있도록 리·동 등 기초생활권 단위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10년 1,003억원)
- * 소외지역 문화 순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체육지도자 파견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 ①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일과 복지의 연계 등 자발적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여 자활촉진
-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 신규 도입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09년 1.5 → 10년 2.0만명) 및 자활근로(09년 4.8 → 10년 6.5만명) 확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지원

② (교육기회 확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

- 대학 재학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시('10.1학기)
-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09년 35 → 10년 39만명)

③ (서민금융 지원) 서민 자활 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09.12월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조성)
-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 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 시행
-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총 386만 가구, 연 10만명 이내)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 제공

④ (소상공인 지원) 대형 업체와의 경쟁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

- 일정 규모 이하(예 :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른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용
-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를 혁신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천억원으로 확대,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 공급
 - '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2만개('10년 2천개) 스마트샵화를 위해 컨설팅·POS 등 정보화기반 구축·자금 연계 지원(신규 1,110억원)
-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추진

4.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보

1. 녹색산업 육성

① (녹색투자 활성화) 녹색기술·프로젝트, 녹색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

- 인증된 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에 있어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
- *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인증된 녹색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만 혜택

② (녹색 기술·산업 육성) 산업 및 기술부문의 녹색성장 잠재력 확충

- 녹색 R&D 투자를 확대(09년 2.0조원→10년 2.2조원)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
- 혁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공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 육성('10년 200개)

③ (녹색산업 해외진출 촉진) 그린 ODA 확대, 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

- 녹색 ODA 비중(양자간 기준)을 '13년 20%, '20년 30%으로 확대
- 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탄소펀드」(약 1,000억원)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CDM 사업을 지원하고, ADB가 조성 중인 「미래탄소펀드」에 EDCF를 통해 투자(최대 2,000만불)

④ (신성장동력 육성)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계지원을 확대**

- * R&D비용 세액공제율 : (기존) 3~6% → (확대후)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5%
- 기 조성된 신성장동력펀드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10년 중 2천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
- * 신성장동력펀드 조성(억원) : (09)6,500(정부 1,100)→(10)2,000(정부 400)
- IT융합 및 핵심소재 나노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출동력화 및 주력산업화**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① ('09년중 1차사업 착공) 국토해양부 소관 95개 사업중 1차분 42개 사업(터키 16, 일반 26개)을 '09년중 착공

- 농식품부 소관 농업용 저수지 등도 '09년 착공(총 99개 공구 중 20개) 추진
- * 국토부소관 사업비 : 15.4조(재정 7.4조, 수자원공사 8조)
- * 사업내용 : 물 확보(13억㎡) 및 홍수 방어(9.2억㎡), 수질개선과 생태복원('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지역주민의 복합공간 창조(자전거길 1,728km 등), 강중심의 지역발전(벚길 복원 등)

② ('10년중 60% 이상 완료) 2차분 사업을 '10.3월까지 착공하고,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

-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10.상반기 중 완료
-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800억원) 지원
- * '10년 소요 사업비 6.7조원(재정 3.5조원, 수공 3.2조원)

③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다양한 발주기관, 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공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3.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①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CO₂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09년 6,400억원 → 10년 7,600억원)
- 부문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관리하고, 관공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

② (온실가스 감축)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 분석하고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검토하여 감축량을 설정
-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시스템과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③ (환경친화적 제도개편) 세제·재정제도에서 환경적 요소를 보다 고려하고,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 강화, 간소한 한식메뉴 개발·보급 등 추진**

④ (해외자원 개발) 자원 정상외교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10.3월)

- **자원개발펀드(1조원) 조성,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 * 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 : (09) 1.3조원 → (10) 2.2조원

5.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 대외협력 확대와 이에 대한 국내 대비 등 우리경제의 개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국가품격을 제고

1.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1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G-20 의장국으로서 '10년 11월 예정된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등에 있어 국익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리더십 발휘
 - * 지속가능 균형성장, 글로벌 금융안전망, 최빈개도국 지원 등
- 2 (국가 위상 제고) G-20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브랜드지수 개발 등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2.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 1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 OECD 개발원조위 가입을 계기로 성숙한 기여국가로서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 ODA/GNI 비율(%) : (08) 0.09 → (12) 0.15 → (15) 0.25
- 2 (발전경험 공유)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원조모델'을 확립·전파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3. 대외협력 강화

- 1 (대외개방 확대) 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추진
 - 美·EU 등 對선진권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 걸프연합(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과 개도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본격화
 - 조만간 발효될 FTA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 종합 지원센터(가칭) 설립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2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 '10년 본격화될 IMF,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
- 3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금번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지역별 특성, 성장 잠재력, 우리경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경협전략'을 수립
 - BRICs, 자원부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신흥국과의 맞춤형 경협사업을 적극 발굴
- 4 (금융협력) '10.상반기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
 - '10년중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
 - *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 ASEAN+3 회원국의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 우리기업의 이슬람채권(Sukuk) 해외 발행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이슬람 경제권과의 금융협력 강화

4. 사회적 자본 확충

- ① (법·질서 확립)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및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
 - 반부패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 반부패·청렴 대책 강화
- ②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신뢰와 연대감을 제고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일몰 연장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이행 공개범위 확대, 병역의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홍보 등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조성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15%→20%)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
 - * 이월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포함),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3년→5년)
- ③ (사회통합 제고) 취약계층 자녀 멘토링을 확대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
 - 휴먼네트워크 사업* 등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
 - * 전문직 종사자·대학생 등과 취약계층 자녀를 1:1로 연결하여 직업정보 공유, 학습 지도 등의 멘토링을 제공
 - 다문화도서관의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등 추진
 - * (09) 1.8억원(시설 2개소, 프로그램 12개)→(10) 3.4억원(시설 4개소, 프로그램 19개)

6.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통계 인프라를 개선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 수립
- ②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10.상반)
 - *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 추가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부여 등
 -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 검토
 - * 예 :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하여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
 -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대(4,172→6,172개 교실)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확충(시간연장형 보육교사 5→6천명)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도시가구소득 130%→전국가구소득 150%이하)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
- ③ (일·가정 양립)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융자지원 상한액 5→7억원 등)하고, 직장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10.상반)
 - * 부설유치원 설치기준 : (현행) 직장직영만 가능 → (개선) 위탁운영 허용
- ④ (한국인 늘리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확대, 국적 관련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편 검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① (국가채무 관리 강화) 국가채무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채무성격에 맞추어 부문별로 밀착 관리
- ②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율이 1% 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계획과의 차이 분석 등 평가 강화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예산지출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10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③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및 재정수입 확대를 도모
- ④ (연금·보험 재정안정) 재정위험 관리체계 강화방안 강구
 - *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ALM)방식 도입·검토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강화

3. 통계 인프라 개선

- ① (통계 생산시스템 정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② (정책수요에 부응한 통계개발) 새로운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을 적극 추진
 -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추진하여 체감물가와의 격차 축소
 -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의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 추진

《 맺 음 말 》

- ① “우리는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
 - 2010년에는 OECD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성장 예상
- ② “내년은 위기이후 세계경제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기존 패러다임이 변하는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 세계경제를 둘러싼 위협과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
 - 글로벌 불균형, 금융규제 강화, 개도국 역할 확대 등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불안 및 보호무역 발호 가능성
 - 자원확보경쟁,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환경의 중요성도 증대
- ③ “경기회복 추세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에 정책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 위기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제취약요인 보완과 위기대응능력 제고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지속
- ④ “아울러 정책의 중심을 중장기 지속발전 과제로 이동하여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도모
 -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대외개방 지속
 -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제고하고 대외역량 강화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 대응

2010년 경제정책과제 세부내용

순서

I. 경기회복 공고화

1.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2. 경제취약요인 보완
3. 위기대응능력 제고
4. 산업체질 개선

II. 일자리 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2. 서비스산업 선진화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5. 인적자본 확충
6. 투자 확대 및 효율화

III. 서민생활 안정

1.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2.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안정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IV.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1. 녹색산업 육성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3.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V.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1.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3. 대외협력 강화
4. 사회적 자본 확충

VI. 미래과제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3. 통계 인프라 개선

I. 경기회복 공고화

- ◇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
- ◇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
- ◇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

1.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① (거시정책)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 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 2013~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 관리대상수지/GDP(%) : (09)△5.0 → (10)△2.9

<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

(예산대비 비율, 괄호는 실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분기	26.9(26.9)	29.7(28.3)	26.8(25.6)	27.0(24.4)	24.9(22.7)	29.5(32.5)
2/4분기	28.0(28.1)	29.3(31.1)	25.3(27.4)	28.7(31.6)	27.1(26.9)	31.1(32.2)
상반기	54.8(55.0)	59.0(59.3)	52.0(53.0)	55.7(56.0)	52.0(49.6)	60.6(64.8)

-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대응
- 가계·기업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정책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사전 대비

② (한시대책) 예외적·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 한시적으로 확대한 정부 일자리는 민간부문 고용회복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 (08) 29만명 → (09) 80만명 → (10 예산) 55만명

-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10년 상반기까지 연장. 다만, 한계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 강화

-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 유도

* (기준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 장기·고액 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10년부터 감축 재개 (09년에 감축조치 일시 중단)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10.6월까지 연장

-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09년 말에 종료

< 한시적 조치에 대한 처리계획 >

비상조치	당초시한	처리계획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09말	단계적으로 정상화
- 보증만기연장		- '10.6월말까지 연장
- 보증비율 상향 조정		- 보증비율 정상화(%) * (09)95→(10.상)90→(10.하)85
- 장기·고액보증 감축 중단		- 가산보증료 부과 등 보증감축 재개
· Fast-Track 프로그램		- '10.6월말까지 연장
·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09말	시한 만료시 종료

2. 경제취약요인 보완

(1) 경제체질 개선

- ① (경제체질)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위주의 경제체질을 개선
 -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확충
 -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Rebalancing)을 위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Framework)」 논의에도 적극 부응
- ② (기업)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잠재 부실을 해소하고 기업체질 개선 도모
 - 진행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용 위험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
 - PEF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
 - * 기업재무안정 PEF 등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중(09.4월 국회상정)
- ③ (가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 완화
 -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지속 적용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 다양화*,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유도
 - * 업계 자율적으로 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 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 ④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10.하반)
 - 국가들 사이의 순위산출을 지양하고, 우리의 경쟁 상대국 및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2) 공공기관 선진화

- ①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추진) 그 간의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 단체협약 등 즉시 공시, 공공기관 평가 시 노사관계 비중 강화, 전 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차등화 및 과다적립 기관 추가출연 제한, 무분별한 수당 정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
- ②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일부기관에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의 전환점(turning point) 마련
 - 일부 기관에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 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 연봉제 도입 등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보수체제로 개편하는 등 내부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착
 -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 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
 - 내부 감사(監事)의 견제기능 강화, 경영평가 지표를 핵심 성과위주로 단순화하고 지표 수 간소화, 경영정보 공시주기 단축 등을 추진
- ③ (Global 역량 강화)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을 선도하는 고(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
 -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중대형화하고 엄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

3. 위기대응능력 제고

- ① (금융부문) 개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 유지 등 국채시장의 안정 노력과 함께, RP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을 도모

-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
 -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 안정화
 - * 계량지표 반영에 따른 대출축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건전성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등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제고
 - 국제논의(G-20, FSB 등)를 바탕으로 금융감독규제 개선 검토
 - 감독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정비
 -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유동성 창출 예방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예: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계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 연계하는 등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자산확대경쟁 방지
 -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범(best practice) 마련
 - 위기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확충 유도
- ② (외환부문) 외화자금흐름, 단기외채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환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
-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 및 외환수급과 괴리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 외화유동성 비율 개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외화자금흐름 등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 * 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 외에 연구기관·은행 등도 참여

- ③ (조기경보시스템) 조기경보모형 및 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의 실효성 강화
- 조기경보모형의 취약요인 탐지·경고 기능(flag-raising)을 제고하여 위기대응과의 연계성을 강화
 - * 현재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고용 등 5개 부문에 대해 관련부처 별로 총 10개의 계량분석모형을 운용 중
 - 비계량적 요인의 영향, 부문간 연관효과, 거시건전성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 강화를 통해 계량모형을 보완
 - 부문별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처별 위기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대외·국가채무 등 거시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

4. 산업체질 개선

(1) 중소기업

- ① (기술혁신 및 생산성 제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기술혁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생산성 향상 추진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10년 350개)를 발굴하여 제품화·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 강화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新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10.10월) 등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 중점 추진
 - * 소기업·수출기업 등 1만개(10~13년) 기업에 대해 생산성 진단부터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연계 지원
- ② (벤처 창업·성장 촉진) 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질 좋은 벤처 육성을 위한 창업·성장 여건 개선
- 기업가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수립·시행하고 실패시 재도전에 대한 지원 강화

- 벤처투자펀드(모태펀드+민간펀드)를 3.5조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요구되는 공장등록증 발급(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등

→ '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하여 총 3만개 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10년 : 3천개사, 6만개 일자리) 창출

- ③ (상생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

*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내용이 2차 이하의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확대(대기업 위주 → 1차 협력사 포함)

- ④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비용 지원('10년 250억원, 100개 기업)

- 글로벌 브랜드 개발, 해외상표 등록, 수출 BI(Business Incubator) 입주, 글로벌 검색엔진 등록 등 해외마케팅 지원

[2] 부품소재산업

- ① (기술개발 지원) 수입대체가 시급하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부품·소재 각 10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집중 지원

* '10~'12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 과제당 지원한도 상향(15→30억원)

-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의 수요기업간, 부품소재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신뢰성 공동연구 지원('10년 400억원)

- ② (소재산업 사업화 지원) 신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3대 소재 분야별(금속·화학·세라믹)로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

* '10년부터 3년간 3대 분야에 1개씩 구축(정부, 민간이 1:1 매칭하여 재원 마련)

- 소재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전문펀드』 조성

* '12년까지 1천억원 이상 조성하되 정부 출자비율을 50%까지 허용

[3] 정보통신산업

- ① (기술개발 지원)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 차세대 메모리, 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4G 이동통신 핵심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선도

- ② (신성장동력 발굴)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이차전지, 3D, RFID/USN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

- '10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충하여 R&D 및 IT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집중 지원

[4] 농어업

- ① (농·수협 개혁) 농어업인 지원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수협 개혁 지속 추진

- 농협중앙회를 연합회-2개 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개편('11년 사업분리를 목표로 농협법 개정(10.2월) 추진)

- 수협중앙회 인력·조직 감축(10%),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부실 일선수협(4개) 통폐합 등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 수협법 개정안 국회제출(09.4월)

- ②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식품 R&D를 활성화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 추진

- 종자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관련 및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R&D 예산 : (09년) 2,169억원 → (10년) 2,357억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우리술) 품질등급·원산지표시 도입(10상), (천일염) 이력추적관리 시범도입
- 농어가의 소득·경영위험 관리 강화
 - 농법개선, 농자재·에너지 비용 감축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 ③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 간척지 등을 활용, 생산·가공·유통, 연구 시설 등이 결합된 수출 주도형 대규모 농산업단지 조성 추진
 - 간척지 장기임대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농어업 회사,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10년 시범사업 10ha) 조성 추진
 - 첨단 수출 원예, 자원순환 축산 등 간척지별 활용계획 수립
 -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조성(10 예산안 600억원) 등 농식품 분야 투자 촉진
- ④ (쌀 수급안정) 풍년에도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량 생산대책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
 - 논에 쌀 이외 콩·밀·렌사료 등을 재배토록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콩·밀 등의 자급률은 높이는 방안 추진
 - 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 상품 거래소 도입, 품목 대표조직 설립 등 검토
 - 국수, 막걸리 등 밀가루 제품을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해 가공용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⑤ 유통산업

- ①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산업발전을 지원할 유통구조 개선의 인프라로서 상품거래소 설립 검토·추진
 - (주요 검토 내용) 상품별 상장가능성, 상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사항, 상품거래소 설립 형태 및 감독체계 등

- ② 상품거래소 설립 검토·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 (09.12월~)
 - 해외 거래소 사례, 국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타당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방안 검토

⑥ 수출경쟁력 강화

- ① (서비스 수출기반 강화) 수출관련 정책지원상 제조업 분야와의 차별을 해소
 - 중국 등 인접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 수출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체계 마련
- ② (수출금융 지원)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거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수은·수보의 금융지원을 강화
 - 수출중소기업 및 선박·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수은)
 - * 수은 수출금융 지원확대 계획 : (09년) 53조원 → (10년) 60조원
 - 수출기업의 거래 리스크 완화, 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 지원규모 확대(수보)
 - * 수보 보험 지원확대 계획 : (09년) 170조원 → (10년) 190조원
 -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
 - * 녹색산업에 대한 부보율 상향(95→100%) 및 보험료 20% 할인
- ③ (해외마케팅 지원 등) 범부처 해외마케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윈스톱 해외마케팅 지원
 - * 관계기관(각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마케팅사업 통합공고, 통합포털 구축 등 추진
 -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중소수출기업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 기존 2개(창원·시화) → 3개 추가조성(남동·광주·구미)

II. 일자리 창출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①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 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
- ②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① (기 발표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 * 08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중
 -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기 발표한 정책이 완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 재정부 제1차관(주재), 교육부·문화부·지경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 * (예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 진행
 - *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11.30 종료)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및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절차 진행
- ② (유망서비스업 육성)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업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를 선정하여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 도모
 -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분야의 유통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의 선진화 추진
 - * 방송·외주제작 분야, 종합유선방송(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모바일 시장(이통사·콘텐츠제공), 온라인 시장(포털·콘텐츠 제공) 등
 -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마련
 - ③ (지역과 연계 강화) 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서비스업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 ④ (서비스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 (business)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전략적 홍보 강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국제포럼(2월), 공개토론회(3월), 정책 설명회(5~6월)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 ⑤ (공휴일 제도 개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① (노사관계 선진화)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
 -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방안 마련
 -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 추진
 -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 검토
- ② (노동유연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
 - (근로기준 선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 추진
 - *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特定日/特定週의 근로시간을 탄력조정하는 제도
 -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

- (근로형태 다양화)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 지원
 -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 운영 추진
- (비정규직 제도개선) 비정규직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확대(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직종 중심)

4.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 ① (국가고용전략 수립)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10년 상반기)
 -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
- ②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 보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재정의 일자리 지원 지속
 -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
 -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 제도를 보완·개선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09년 12.9만명 → 10년 14.0만명) 및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 기존 8개(노인 돌봄 등) → 10개 사업(아이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
- ③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산학연계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 실시 등 취업지원 강화

- * 청년의 구직정보와 중소기업의 구인정보 DB 대상을 확충
- * 관계 부처의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 등을 연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구인정보를 포함

-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업체를 구축하여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무유인 제고

-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우대 지원

- * 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신청시 가점부여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펀드(12년까지 1조원 조성)를 활용하여 문화복지·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 * 공동물류센터 건립, 문화복지시설, 주차시설확충 등

⑤ (외국인 인력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외국인 인력도입·관리 방안 검토

⑥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

- 내실 있는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을 창업·취업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창업전담인력을 배치(10년 : 21억원)

- * 창업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센터에 인건비의 70%를 지원

⑦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대폭 확대

- * 실업자훈련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중 : (09)23% → (10)71%

-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을 범정부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확대(10.4월)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 제고

5. 인적자본 확충

① (교육제도 개혁)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 * 고교 입시제도 개선 외고·자율형사립고 등 복잡다기한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

② (대학 선진화) 경쟁·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 대학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방안을 통해 퇴출 유도

- * (1단계) 개선권고→(2단계) 재정사업 일부배제, 정원축소 등 시정조치→(3단계) 퇴출유도

-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의 출연을 허용

-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연내 국회제출)

- 학생, 기업 등의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공개(08.12월 시행) 범위 확대

- * 예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등

- 국내유치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의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10.상반)

-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광양분교(2008. 3월 유치)

③ (실용형 인력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

- 대학 부지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방안 마련 추진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DB구축)·홍보하고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 연구개발사업 지원시 연구인력 활용 확대 유도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 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 산학간 연계지수를 개발하여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 산업체 등과 대학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약학과(72개 대학, 226개 학과)에 대한 활성화 방안 추진
 - * 예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한 기업의 부담경감(학비의 100%→50% 등)
- 경제단체가 기업 공개채용 시즌(연 2회) 이후 기업 인재상과 우리 인력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보고서 발표('10년 전경련 시행예정)

5.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1 (기업관련 규제혁신 지속)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추진
 -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수립
 -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 *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대비한 범부처적 노력 강화
 - * 재택창업 시스템(Start Biz) 도입·활성화를 통한 창업절차 간소화 등

- 2 (투자 인센티브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안 마련
 - 외국인투자중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포함
 -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중심으로 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R&D 재정투자: 09년 12.3조원 → 10년 13.6조원)
- 3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국가산업발전 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 녹색기술산업, 기술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중점유치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IR 등 집중적인 유치활동 전개
 - 수요자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정책센터」를 설치(10년중)하여 투자유치 지원조직을 강화
 - *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도 지원범위에 포함,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
- 4 (R&D 투자)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정부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
 - * (08) 11.1 → (09) 12.3 → (10안) 13.6 → (11계획) 14.9 (12계획) 16.6조원
 -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민관 R&D 파트너쉽 강화
 - 녹색성장 등 상위정책과의 R&D 연계강화,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평가("Early Kill"),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Ⅲ. 서민생활 안정

- ◇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
- ◇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1.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1) 물가의 안정적 관리

- 1 (중기 물가안정목표) 3년 평균 목표달성 → 매년 점검·설명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대인플레이 안정 및 제도운영의 책임성 제고
 -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총수요 압력을 안정적으로 관리
 - * 10~12년 중기물가안정목표 : 소비자물가 3.0±1.0%, 연 단위로 점검·설명
- 2 (주요 제품가격 안정) 중기관측 도입(6개 품목), B2B 거래품목 확대(28→40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공급안정 유도
 - 농협의 석유유통 사업규모 대형화,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여건 개선
 - * 석유수입업 저장시설 요건 : (기존) 배타적 시설 → (개선) 공동시설도 인정
 -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라면·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담합감시를 강화
 - * 09년 담합조사 분야 : 교복, 음료, LPG, 소주, 온라인 음악서비스 등

- 3 (공공요금 안정) 원가검증 기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인상요인 최소화 등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비자단체(원가분석팀)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검증 자문을 수행토록 하여 요금결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유인장치 도입 검토 등 보다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방안 강구
 - 4 (주요 서비스요금 안정)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경쟁여건 조성
 - 재판매제도 도입,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등 이동통신 시장의 국내외 경쟁여건을 강화
 -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인상실적에 따른 재정 지원사업 차등화 등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유도
 - 5 (물가 불안요인 대비) 원자재 비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 비축기반 마련
 - * 원자재 비축재고(조달청, 일본) : (09) 49 (10) 53 (11) 55 (12) 60
 - 원자재가격 급등시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독과점 완제품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율 인하 검토
- ##### (2) 부동산 시장 안정
- 1 (시장안정기조 확립)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래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 적극 대응
 - 부동산 채투자 성향이 높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 (대토·채권보상 활성화)하여 보상금에 의한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
 -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은행 10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10.2월)하고, '10년 중 2조원 규모 토지를 비축

-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② (주택공급 확대) 상시 수요가 있는 도심과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기조를 조기에 구축

-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을 본격화하여 도심내 공급기반을 확충
- 보급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사전예약방식)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
* '10년 사업승인 계획 : (당초)전국 14만호 → (확대)전국 18만호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① (취약계층 지원) 미혼모·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 : 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신규 도입('10.7월 시행)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 매월 9~15만원 지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
* 기초노령연금 : (09) 363만명, 2.5조원 → (10) 375만명, 2.7조
** 노인일자리 : (09) 16만개, 1,166억원 → (10) 17.6만개, 1,286억원
- 노인치매 검진비 지원대상을 확대(2→3.2만명)하고,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해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를 신규 지원
-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조정('10.1월→'10.3월)

② (주거 복지) 수요자 중심의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
* 임대유형별 공급계획물량 (연평균) : (영구임대) 1만호, (국민임대) 4만호,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호, (장기전세) 1만호, (10년·분납임대) 2만호
- 도심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
*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중 50%수준('10~'11년 약1.6만호)을 공급
-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신규 추진('10년 415억, 1만가구)하여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시설 등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09년 1천호 → '10년 1.5천호)
* 좌식 샤워시설, 단차제거, 욕실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편의시설 설치

③ (농어민 복지)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스템 개선

-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2차 5개년계획(10~14)」 추진
- 주거·교육 등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시행(10.1/4분기)
*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개부문 31개 항목의 서비스기준 설정 검토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합리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연금보험료 지원규모 확대 추진
* 건강보험료 : 차등지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09.4월 정부안 제출)
** 연금보험료 지원규모 : (09) 가구당 394천원/연, 총 917억원
→ (10) 가구당 423천원/연, 총 940억원
- 질병·사고 농가 등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을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
*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09) 13천가구 → (10) 15천가구
** 가사도우미 : 다문화가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확대 지원

④ (문화 복지) 지역·계층간 문화향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 * 소외지역 문화 순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체육지도자 파견,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운영, 문화 및 체육 바우처 등
- 문화서비스가 촘촘히 보급될 수 있도록 리·동 등 기초생활권 단위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10년 1,003억원)
- * 소외지역 문화 순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체육지도자 파견,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운영, 문화 및 체육 바우처 등
- 지역 근대산업 유산의 특화, 폐교·동사무소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 * 지역 근대산업 유산 문화공간화 사례 : 신안(염전, 소금창고 → 미술관, 공연장화), 포천(폐채석장 → 조각분야 교육전시센터화) 등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①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일과 복지의 연계 등 자발적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여 자활촉진

-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 신규 도입
-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2~3년후 약 1,000만원)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09년 1.5 → 10년 2.0만명) 및 자활근로 (09년 4.8 → 10년 6.5만명) 확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지원

② (교육기회 확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

- 대학 재학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시('10.1학기)
- *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하고, 졸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09년 35 → 10년 39만명)

③ (서민금융 지원) 서민 자활 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09.12월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조성)
-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 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 시행
-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총 386만 가구, 연 10만명 이내)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 제공
- 일정소득 이하 근로빈곤층에게 만원의 보험료로 상해·사망시의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

④ (소상공인 지원) 대형 업체와의 경쟁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

- 일정 규모 이하(예 :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른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용
-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를 혁신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천억원으로 확대,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 공급
- '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2만개('10년 2천개) 스마트샵화를 위해 컨설팅·POS 등 정보화기반 구축·자금 연계 지원(신규 1,110억원)
-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
- * 가맹점 수수료(08말) : 평균 2.22%, 최고 3.3%(유흥업 4.5%)
· 대형마트 1.5~2.0%, 영세가맹점 1.5~2.2, 민박, 노래방 등 3.0% 초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상품권으로 구매시 할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IV.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보

1. 녹색산업 육성

- ① (녹색투자 활성화) 녹색기술·프로젝트, 녹색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
 - 인증된 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에 있어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
 - *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인증된 녹색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만 혜택
- ② (녹색 기술·산업 육성)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
 - 신재생에너지, CO₂ 저감 등 녹색 R&D 투자를 '09년 2.0조원에서 '10년 2.2조원까지 확대
 - 해상풍력 시범단지 구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녹색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도 지원
 - 혁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공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 육성('10년 200개)
 - 그린홈 보급('10년 18만호), LED 보급 확대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
- ③ (녹색산업 해외진출 촉진) 그린 ODA 확대, 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
 - 녹색 ODA 비중(양자간 기준)을 '13년 20%, '20년 30%으로 확대
 - 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탄소펀드」(약 1,000억원)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CDM 사업을 지원하고, ADB가 조성중인 「미래탄소펀드」에 EDCF를 통해 투자(최대 2,000만불)
- ④ (신성장동력 육성)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계지원을 확대
 - 핵심 원천·상용화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10년 150억원)
 - 신성장동력 및 기초·원천 R&D 비용에 대한 세계지원을 확대
 - * R&D 비용세액공제율 : (기존) 3~6% → (확대후) 신성장동력 20%, 기초원천 25%
 -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
 - * U-health 표준·인증제 도입, U-러닝 핵심콘텐츠 개발, 국제표준화 등
 - 기 조성된 신성장동력펀드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10년 중 2천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
 - * 신성장동력펀드 조성(억원) : (09)6,500(정부 1,100)→(10)2,000(정부 400)
 - IT융합 및 핵심소재 나노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출동력화 및 주력산업화
- ⑤ (신성장분야 민간투자 촉진)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로드맵」을 마련(09.12월)
 - 투자실적, 투자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⑥ (해외진출 지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출동력화 추진

- 로봇, LED 조명 등 신성장동력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
-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10.1월)

⑦ (전문인력 양성)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해 역량을 제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① ('09년중 1차사업 착공) 국토해양부 소관 95개 사업중 1차분 42개 사업(턴키 16, 일반 26개)을 '09년중 착공

- 농식품부 소관 농업용 저수지 등도 '09년 착공(총 99개 공구 중 20개) 추진
 - * 국토부소관 사업비 : 15.4조(재정 7.4조, 수자원공사 8조)
 - * 사업내용 : 물 확보(13억㎡) 및 홍수 방어(9.2억㎡), 수질개선과 생태복원('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지역주민의 복합공간 창조(자전거길 1,728km 등), 강중심의 지역발전(벚길 복원 등)

② ('10년중 60% 이상 완료) 2차분 사업을 '10.3월까지 착공하고,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

-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10.상반기 중 완료
-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800억원) 지원
 - * '10년 소요 사업비 6.7조원(재정 3.5조원, 수공 3.2조원)

③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다양한 발주기관, 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공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3.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①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기술개발, 국민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CO₂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09년 6,400억원 → 10년 7,600억원)
- 부문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 * '10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 이상 대규모 사업장(50여개)부터 적용하여 12년까지 2만 TOE 이상 사업장(400여개)까지 확대 적용
-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관리하고, 관공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
-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10년 초부터 실시

②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 분석하고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검토하여 감축량을 설정
- 부문별로 실효성있는 감축 이행방안과 소요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하되,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립
-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
 - *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를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경제부처간 협의·조정체계 구축
- 감축 이행이 분배,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

- ③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개발
 - 배출권 할당 방법(무상배분/경매), 할당 규모(업종별·업체별), 거래소 설립방안, 배출권 등록방안 등을 종합 검토
- ④ (환경친화적 제도개편) 녹색성장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
 -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 강화, 간소한 한식메뉴 개발·보급 등 추진
- ⑤ (해외자원 개발) 자원 정상외교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10.3월)
 - 자원개발 분야에 시중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운영
 - * '09년내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추가 5천억원규모의 펀드는 '10.상반기 중 조성
 - 정부·국책은행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금리우대 등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 * 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 : (09년) 1.3조원 → (10년) 2.2조원
 - 유망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지분 확보 추진
 - 자원개발협회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집·공유를 위한 On/Off-Line 네트워크(정보시스템)를 구축
- ⑤ (기후변화 적응) 극지기후변화감시소(남극) 세계기상기구(WMO) 지정('10.12), 지역기후모델 구축('10.9)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 전국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V.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 대외협력 확대와 이에 대한 국내 대비 등 우리경제의 개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국가품격을 제고

1.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①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G-20 의장국으로서 '10년 11월 예정된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등에 있어 국익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리더십 발휘
 - * 지속가능 균형성장, 글로벌 금융안전망, 최빈개도국 지원 등
- ② (국가 위상 제고) G-20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브랜드지수 개발 등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2.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 ①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 OECD 개발원조위 가입을 계기로 성숙한 기여국가로서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 ODA/GNI 비율(%) : (08) 0.09 → (12) 0.15 → (15) 0.25
 - ** EDCF 집행규모 : (09년) 3,500억원 → (10년 계획) 4,700억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지원대상국을 조정하고, 주요국에 대해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

② (발전경험 공유)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원조모델'을 확립·전파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중점지원국을 지속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모듈화)하여 사업을 체계화
- * KSP사업 중점지원국 : (09)1개국(베트남, 10억원)→(10)4개국(아시아, 36억원)

3. 대외협력 강화

① (대외개방 확대) 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추진

- 美·EU 등 對선진권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 걸프연합(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과 개도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본격화
- 조만간 발효될 FTA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 종합 지원센터(가칭) 설립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 FTA 증가에 따른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보급, 교육·홍보 강화 등
- 2010년 WTO DDA 협상타결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②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 * 현재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자본증액 논의가 진행중
- '10년 본격화될 IMF,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 확대 추진
-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

③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금번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지역별 특성, 성장 잠재력, 우리경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경험전략'을 수립
- * 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10년 상반기) 등
- BRICs, 자원부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신흥국과의 맞춤형 경험사업을 적극 발굴

④ (역내 금융협력) CMI 다자화 체제 출범과 역내금융기구 설립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한 단계 진전

- '10.상반기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
- * CMI 다자화 구축에 대한 법률계약서 작업을 09년중 마무리하고, 회원국 국내절차를 거쳐 '10.상반기중 발효 예정
- '10년중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
- *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 ASEAN+3 회원국의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⑤ (이슬람 금융협력 강화) 이슬람 채권(Sukuk) 해외발행 지원 및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이슬람경제권과 금융협력 강화

- 이슬람 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 중동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여 對韓 투자기회를 홍보하고,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3. 사회적 자본 확충

- ① (법·질서 확립)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및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
 - 반부패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 반부패·청렴 대책 강화
 -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원상회복하는 제도
- ②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신뢰와 연대감을 제고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이행 공개범위 확대, 병역의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홍보 등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조성**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15%→20%)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
 - * 이월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포함),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3년→5년)
- ③ (사회통합 제고) 취약계층 자녀 멘토링을 확대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
 - 휴먼네트워크 사업* 등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
 - * 전문직 종사자·대학생 등과 취약계층 자녀를 1:1로 연결하여 직업정보 공유, 학습 지도 등의 멘토링을 제공
 - **다문화도서관의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등 추진**
 - * (09) 1.8억원(시설 2개소, 프로그램 12개)→(10) 3.4억원(시설 4개소, 프로그램 19개)

VI.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인프라를 개선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수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 수립**(‘10.하반)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10.상반)하고, 평가결과를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
- ② (임신·출산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
 -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
 - * (09) 도시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 (10)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초음파검사 등 출산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09) 20만원 → (10) 30만원
- ③ (자녀양육 지원)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10.상반)
 - *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 추가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부여 등
 -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 검토**
 - * 예 :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하여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
 -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 * (09) 소득하위 60%이하 → (10) 소득하위 70% 이하
 - ** (09) 부부소득 단순합산 → (10)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합산

- 돌봄서비스를 야간까지 연장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확충

*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 (09) 4,172개 → (10) 6,172개 교실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 (09) 5천명 → (10) 6천명

- 가정 내에서 돌보는 맞벌이가구 영아를 위해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신규 도입

* 소득하위 50%이하가구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월58~69만원) 지원

④ (일-가정 양립) 여성이 일하면서 자녀양육이 가능한 여건 마련

- 직장 내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

* 설치비 지원상한액 : 용자지원(5→7억원), 시설전환비(1→2억원)
 * 부설유치원 설치기준 : (현행) 직장직영만 가능 → (개선) 위탁운영 허용

-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09) 2개 부처, 9개 사업 → (10) 3개 부처, 11개 사업

⑤ (고령사회 기반마련) 실버세대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 조성

- 고령자친화적으로 설계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 (09) 1,000호 → (10) 1,500호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적용대상을 실버주택까지 확대(10.하반)

* (09)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 (10) 실버주택까지 확대

⑥ (한국인 늘리기)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확대, 국적 관련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편 검토

-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의 우리국적 선택을 유도하고 복수국적자의 우리국적 이탈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① (국가채무 관리 강화) 국가채무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채무성격에 맞추어 부문별로 밀착 관리

- (총량관리)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
- (적자성 채무) 민자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적정 수준 유지노력을 강화
- (금융성 채무) 대출금 등 대응자산의 관리를 강화

②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율이 1% 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계획과의 차이 분석 등 평가 강화
- 대규모 신규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예산편성 피드백 기능을 강화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예산지출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10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통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③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는 그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각·임대·개발하되, 미래 수요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비축

* (기존) 유지·보전 ⇒ (개선) 매각·비축·임대·개발

-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 및 위탁기관의 관리 조직을 확충·개선

④ (연금재정 안정)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강화

*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ALM)방식 도입·검토,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강화

3. 통계 인프라 개선

- ① (통계 생산시스템 정비) 행정자료와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등을 활용한 통계 작성으로 통계의 정합성을 제고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우선 추진
 - 인터넷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확대 도입
 - *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비중 확대: (05)0.9% → (10)30%
 - * 농업통계 인공위성 원격탐사 시범실시
- ② (정책수요에 부응한 통계개발) 새로운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을 적극 추진
-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추진하여 체감물가와의 격차 축소
 -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품목·가중치 조정,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19→40여개) 확대
 - '10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주기 단축(5년→3년+2년) 등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 추진
 -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의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 추진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하면서 물가,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
 - 경제위기 징후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반 규제를 개선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및 **벤처투자, 지역투자 여건 개선**
-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과 전략적 홍보 강화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② 경제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화

- 기초·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등 **신 성장동력산업 지원**과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기반 확충**,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실시, 예산낭비 대응체계 강화 등
-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발생주의 회계 정착, 국가계약 제도 개선으로 **재정운용시스템 선진화**
-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토록 뒷받침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 자율권 확대

③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

-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흥경제국과 경제협력, 국제조세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개방정책의 지속 추진**
- **G20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EDCF 확대,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품격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① 누구나 교육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저소득층 가구의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 재학중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도입

② 서민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 대폭 흡수
-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현장 확산**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③ 우주기술·원자로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 국가수요에 대응한 **순차적 위성개발 및 발사**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및 단계적 기술 자립화 추구
-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기준 모델 개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

④ 국내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확대

⑤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 기초·원천 및 융합기술 개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① 경기침체기 문화분야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인프라 확충
 - 문화서비스 촘촘히 프로젝트 추진(기초생활권까지 서비스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 지역 근대 산업유산 특화 및 유희시설(폐교, 동사무소 등) 활용,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 ②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및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 미디어·콘텐츠 펀드 1,000억원 출자(12년까지 3,000억원의 콘텐츠 산업 투자조합 결성)를 통해 콘텐츠산업분야 투자 활성화
 - * 방송콘텐츠 제작의 중점지원 및 융합형콘텐츠, 드라마, 게임 등 제작에 활용
 - 가상현실, CG, 방통융합형콘텐츠, 가상세계 등 4개 분야 융합형콘텐츠 개발(140억원) 및 비즈니스 투자여건 조성
- ③ 저작물 창작-제공-이용의 창조적 선순환 기반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기술 체계 마련,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 내실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
- ④ MICE산업, 의료관광 등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 및 관광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산업기반 마련, 국제네트워크 활용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전개, 공연관광 및 쇼핑관광 활성화 등
- ⑤ 스포츠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추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
 -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 구성(국가차원의 유치전략 점검 등) 및 행·재정적 지원, 민관 차원의 해외 유치활동 적극 전개 등
- ⑥ 전략적 국가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제 활성화
 - G20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활용 국가이미지 집중홍보,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 캠페인 등

농림수산식품부

- ① 농어업인 지원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수협 개혁 추진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및 부실 수협 구조조정 등 지속
- ②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정 강화
 - 농법 개선, 농자재·에너지 비용절감 등 대대적인 비용절감 추진
 -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경영위험 관리 강화
- ③ 농수산물물의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선행관측 도입, 품목대표조직 육성 등으로 농어업인의 자율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쌀 등 주요품목의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 마련
 - 시군 유통회사 설립 등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되는 사이버거래 및 직거래를 활성화
- ④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추진 및 녹색생명산업 기반 확충
 - 가축분뇨·해조류 등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자원화 시설 확충 및 해외 탄소배출권 조립 확대
 - 종자산업 육성, 동식물 자원화 등 녹색생명산업 기반 구축
- 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에 전력
 - 국가 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술·천일염·기능성식품 등 전략품목의 산업화 촉진
 - 한식세계화 재단 설립, 수출전문단지 조성 및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추진
- ⑥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불만해소장치 마련
 - 주거·교육 등 농어촌 지역 공공서비스 가이드라인(농어촌서비스 기준) 시행,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
 - 농어업 분야 민원·피해 등의 종합 상담·처리·정책화 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

- ①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통한 투자·일자리 창출 확대
 - 전기차 조기양산('11년), 차세대 메모리개발(~'13년)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관련 투자유도
 - 광역권별 선도산업 본격육성 및 新성장거점* 구축, 산업단지 구조고도화('10.4월 시범사업), 지역별 특화된 고용확대 방안 마련
 - * 광역권별 핵심, 배후지원 산업단지 선정('10.하반기)
 - 수출 4100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보험·보증확대,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확대, 원가절감형 무역거래 기반구축 등을 중점 추진
 -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한 통상협력 기반강화와 상해 Expo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 국민복지연계형 R&D, 에너지복지시스템의 제도화, 소액서민 보험 제공 등 국민생활 안정 추진
- ②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이행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 *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 추진, 신성장동력펀드 추가조성 등
 -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및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추진을 지원
 - 부품소재 발전전략* 추진과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지원
 - * 세계수준의 10대 핵심소재 육성, 20대 주요 수입 부품소재 국산화
 - ** 융합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바이오·나노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지원
- ③ 녹색성장 본격 추진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에너지가격 체계 개선,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촉진
 -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요창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본격화, 바이오디젤 보급확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대
 - 해외자원개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강화
 - * 용차지원 비물확대('09년 73%→'10년 85%), 매장량담보 용차도입 등
 -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 울산 원유비축기지 준공, 희유금속 재활용 등

보건복지가족부

- ① 기존 사회안전망 흡수, 민간지원 연계 등을 통해 한시대책 종료 이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 금년 한시대책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지원
 - * 10년 수급자 수를 09년 추경예산 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확대·편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민간후원 등으로 최대한 연계·지원
-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일자리 지원 확대, 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등 지원 강화
 - * 사회서비스 등 취약계층 일자리 : 09년 335천명 → 10년 380천명
- ③ 서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 ④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최저생계비 150% 이하 33만명에게 중증장애연금 지급 ('10.7월, 1,519억)
- 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강화
 -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등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대응 강화
 - * 둘째아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산정기준 완화
 - *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가정 0세아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신설
 -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⑥ 보건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 의료산업에 대한 R&D 및 인프라 투자 강화
 - 첨단 의료산업 핵심인프라로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환경부

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및 강릉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국제적 환경명품 브랜드화 추진
- 지역기후모델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및 한국판 스텐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적응역량 강화

② 국토환경 전반과 국민의 환경의식 업그레이드

- 4대강 살리기의 수질·수생태·취수대책 추진 및 포스트 4대강 대비 유역관리체계 강화
- 새만금을 녹색명품화하는 수질개선대책 및 환경생태용지 활용방안 마련
- 주요 도시의 공기질 개선, 녹지·친수공간 확충, 악취·소음 사전예방 등을 통해 쾌적하고 자연미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
- 생태계 복원종합대책 수립,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 및 토양오염 조기진단·정화체계 구축 등 국토환경관리 강화
-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③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친환경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09년 1,053억원 → '10년 1,143억원)
- 물산업, 생태관광산업, 그린카산업,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 친환경상품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④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및 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해 최적 상수관망시스템 구축
- 석면피해 예방·구제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성 발암물질 국가 우선관리목록(NPL) 작성·공표를 통해 녹색화학 전환 촉진

노동부

①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 확립

- 경제위기 후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해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제도 등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평가

②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개편

-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산업계 참여 확대, 현장중심 훈련 촉진 등

③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지속 추진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법 시행 연착륙 지원,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④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 등 유연합리성 제고

-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임금 관련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장시간 근로 관행 완화, 퇴직연금 활성화

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뉴스타트 프로젝트 제도 등 개선,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하는 여성 육아부담 해소,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 강화 등 고령자 취업촉진 지원

여성부

- ①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 유연한 근로가 가능한 '퍼플 잡(Purple Job)' 직종 발굴·확산
 - * 퍼플 잡(Purple Job) :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
 - * 퍼플 잡(Purple Job) 적합 일자리 : 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
 -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
- ②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및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추진
 -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CEO,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기업 내 여성리더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리더십 교육 등
- ③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확대
 - 주부인턴, 취업설계사 등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 * 주부인턴 : ('09년)3,880명 → ('10년)4,620명
 - * 취업설계사 : ('09년)360명 → ('10년)539명
 - 경력단절여성의 ONE-STOP 취업지원기관 확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9년)72개소 → ('10년)77개소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

국토해양부

- ① 홍수, 물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
 - 2차 공사 착공(툰키 '10.2, 일반 '10.3),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등을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 추진
- ②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원 강화
 - 보금자리 확대공급(14→18만호), 철도부지사업 주택건설 인허가('10.12),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10년~) 등 추진
- ③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를 지속 확충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10.10, 대전) 착공
- ④ 해안권 중심의 지역개발을 위해 남해안권에 이어, 동·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10.상)하고, KTX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마련('10.9)
- 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적극 조성
 - 그린홈 건설, 신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10.12),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허용('10.3),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10.9) 등
- ⑥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항만 개발,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방식 다양화로 차별화된 항만복합개발 및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 광역경제권에 맞춘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재개발 재정지원 기준 확정, 시범마리나 개발계획 수립 등 추진('10.12)

공정거래위원회

-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경쟁정책 추진
 - 진입규제 정비,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 방지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 경제위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행위,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② 환경·에너지 등 폭넓은 사회전체적 가치까지 고려한 책임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 추진
 - 녹색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 방지
- ③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집행 강화
 - 상조업, 다단계, 가맹사업 등 서민피해가 빈번한 분야에 대한 법집행 노력 경주
 - 2·3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행위 개선 도모
- ④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나타나는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
 - 외국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國格 제고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쟁정책 기술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 ① 예외적·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
 - 보증특례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09년말에 종료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내 부실을 제거하고, 재무안정 PEF 도입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 ②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 국제적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예대율 안정 등 방안을 추진
 - 주택담보 대출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
- ③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 서민층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감독 강화 및 제도개편 등 추진
- ④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의 발전기틀을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효율화하고,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 금융회사 내실경영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 민영 광고판매대행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종교·지역방송 지원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 수립**
-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 도모**
- 4G 이동통신, 3DTV, 개방형 IPTV 등 미래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선도**
-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 강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추진**

②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고도화

- '12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완전 종료에 앞서 최적 방안 마련을 위해 3개 군 지역에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
- '한국형 미래인터넷'의 비전을 제시하고,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선도망 구축 및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 및 DTV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3DTV 실험방송 추진**

③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

- 통신요금 **지수 개발, 재판매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육성**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막·화면해설 방송 등 수신기 보급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

통 계 청

① 위기 이후의 경제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진단 관련 통계 확충

- 경기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지수 개발**
* 도·소매 재고액지수,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순환시계 등
- 업체규모별 고용변동 파악을 위한 **사업체규모별 취업자 지표 개발**
- 지자체에 대한 추계기법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시·군·구별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 확충**

②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녹색성장관련 통계생산체계 구축

- 부문별 배출통계 수집, 관련자료 검증(QA/QC)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체계 **구축**
- **녹색성장·녹색생활 지표 개발 및 통합DB 구축**

③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Green Census로 실시

- 인터넷조사 확대(05년 0.9%→10년 30%),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응답편의 도모**
* 아파트 주택항목 5개(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등)의 행정자료 대체
-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가정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항목 선정**
* 교통수단 보유 및 자전거 이용, 난방시설, 국적, 입국연월 등

④ 기존 통계의 정비, 행정자료의 활용, 전자조사 확대 등을 통해 통계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응답부담도 경감

- 유사통계 및 유용성이 낮은 통계를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신규통계 개발에 활용**
- 국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신규통계를 작성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및 인터넷 등 활용**

중소기업청

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및 인력난 완화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원·대학(원)생·퇴직인력등의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
- 교수·연구원 창업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요건 완화, 실험실창업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등 대학·연구기관을 기술창업의 요람화

②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한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

-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스마트 샵 육성(10년 2,000개), 지역별 상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경영능력을 혁신(연 13만명 교육)
-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함께 개발하는 '지역상권활성화제도'를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정착을 위한 마케팅 강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사업(교육·컨설팅 이수자, 스마트샵, 프랜차이즈 창업 등)에 맞추어 연계하고 신용보증규모를 확대

* 신용보증공급(조원) : ('09) 11.9 → ('10) 12.6

③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활력회복 지원 강화

- 녹색·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기술, 수출유망·수입대체 유망품목 등 미래성장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5,607억원)
-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진단부터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현장 생산성 대책을 추진('10~'13년)
-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확대하고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R&D·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

산림청

① 연료비 부담이 많은 농산촌 위주로 저렴한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펠릿보일러 확대 보급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비 인하

② 국제기구 설립 및 국제회의 개최, 해외조림, 글로벌 산림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

- 아시아지역 그린허브 구축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및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개최 추진
- 산림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산림 자원외교 확대
-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한 산림녹화기술 전수 및 양자협력 강화

③ 새만금 지역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한 생활공감형 녹지공간 확충

- 새만금 8개 용지별 개발계획을 녹지축으로 연결함으로써 과감한 녹지총량 확보 및 완벽한 방풍림 조성 추진

④ 4대강 상류지역의 토석유출 예방 및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유역정비사업 추진

⑤ 국민들이 숲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생기부터 노년기 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